

임현진 · 공석기 저, 『뒤틀린 세계화: 한국의 대안 찾기』(서울: 나남, 2014)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세월호 사건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경쟁과 효율 만능주의에 기인하며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번 참사는 인간보다 돈을 중시하는 전도된 가치와 이에 편승한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 및 무책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단원고등학교 페이스북을 운영하던 한 학생은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선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한 사회적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며,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치적이기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프레시안, 2014/05/14).

임현진 · 공석기 저, 『뒤틀린 세계화: 한국의 대안 찾기』의 서평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세월호 참사야말로 우리에게 ‘뒤틀린 세계화’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러다가 세계화 시대의 위험사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접하고 마치 이번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 원인부터 위험 관리 및 대처의 총체적인 실패에 이르기까지 예고라도 하고 있었던 듯하여 섬뜩해지기까지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돌진적 근대화(rush-to-modernization)를 추구한 나머지 짧은 기간 동안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달성한 성장의 빛만큼 고통의 그림자도 존재한다. 고속성장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해방, 그리고 여유로운 소비사회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빈번한 산업재해와 환경파괴, 연이은 대형 참사를 낳고 말았다(41쪽).

그러나 [한국의 위험 통합관리체계는] 현실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전국 정전(blackout) 등의 위기가 터졌을 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실제 이러한 위기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자연재난과 전쟁 등의 위험만을 고려하는 한계를 보인다. 더 큰 차원의 위험과 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위기 관리는 국가만의 영역이 아니며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위기관리 거버넌스 위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43-44쪽).

이 책은 그만큼 세계화 시대의 복합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현실에 매우 시의 적절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이 책은 모두 열두 마당(저자들의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마당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반세계화라는 대립적 관점을 소개한 후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세계화(alt-globalization)의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¹ 둘째 마당에서 여덟째 마당에 걸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7가지의 '핵심 문제와 극복 방안'을 각각 '위험과 성찰적 세계화', '금융과 자본주의 4.0', '빈곤과 사회적 기업', '자원과 녹색 에너지', '식량과 식량주권', '전쟁과 인간안보', '이주와 소수자 권리'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아홉 번째 마당에서 열한 번째 마당까지는 대안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한 시민사회 프로젝트로서 세계시민,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라는 3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세계시민으로 거듭나서, 윤리적 소비자로서 행동하며, 마을 공동체에서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열두 번째 마당은 대안세계화의 방향과 과제를

¹ 잘 알려진 영국 런던정경대학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그램(LSE Global Governance)은 세계화에 대한 지구시민사회의 입장을 지지론자(supporters), 거부론자(rejectionists), 개혁론자(reformists), 대안론자(alternatives), 퇴행론자(regressives)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대안론은 지구화로부터 이탈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삶의 양식을 계발하고 자체적 공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뒤틀린 세계화』에 있어 대안론은 사회적 경제 영역과 마을 공동체와 같은 자율적·대안적 공간을 인정하되 이러한 풀뿌리 차원의 노력들이 세계시민의식에 기초하여 전 지구적으로 확산·연대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인간적인 세계화로의 개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LSE GG의 개혁론과 대안론을 상승적으로 종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평가받을 만하다. LSE GG의 입장은 Kaldor et al.(2004) 참고.

종합·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안세계화는 거대하고 복잡한 주장이 아닌 우리 주변의 작은 실천에서 찾아야 한다’로부터 ‘세계시민으로서의 현장 참여를 착한 소비와 마을 공동체에서 찾자’에 이르기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적 대안으로 요약·정리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의 기본 목표를 “대안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친세계화 혹은 반세계화라는 일방적 입장을 뛰어넘어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유형의 위험과 위기들을 성찰적 자세로 진단하고 이것을 지역 혹은 일상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처방을 찾아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209쪽).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저자들은 세계화에 대한 거대한 담론, 추상적 이론 그리고 도덕적 규범을 열거하는 식의 “허탈한” 논의 대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계화의 7가지 핵심 문제들을 선정하여, 적절한 통계자료와 예시를 통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대한 논의들을 주요 개념 내지는 화두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주요 국내외 실제 사례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제도적·정책적·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위험사회로부터 시작하여 마을 공동체와 세계시민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논의들을 망라하고 있다. 독일의 재생 가능 에너지 마을 프로젝트와 이태리 볼로냐와 트렌토의 협동조합을 넘어 한국 부안의 등용마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넘나들며 흥미로운 실천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위시하여 국가-국제기구-기업 등 다양한 영역의 여러 주체의 혁신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Piketty, 2014). 7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에 1700년대 이후 300년에 걸친 방대한 통계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웃돌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습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로 전락하고 있는 현 자본주의의 ‘뒤틀린 세계화’의 단면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듯하다.

이에 비하여 『뒤틀린 세계화』는 230여 페이지 남짓한 분량에다 비록 적절한 통계 자료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는 있으나 엄밀한 통계 분석보다는 예시와

에피소드 및 사례에 기초한 다소 인상적인(impressionistic) 분석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² 그러나 80%의 누진적 소비세와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같은 다소 극단적인 제도적 대안 제시 정도에 머물고 있는 『21세기 자본론』과 비교하여 『뒤틀린 세계화』는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실천적 함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실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피케티도 한 한국 신문과의 인터뷰 중 인정한 부분이지만 사회과학의 역할과 기여는 엄밀한 과학적 분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사회과학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주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보다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보다 좋은 질문들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적 토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건 사회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인 동시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한겨레』, 2014/05/15).

『뒤틀린 세계화』는 현 21세기 ‘세월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매우 시의 적절한 ‘좋은 질문들’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과 거버넌스의 대안 모색을 위한 양질의 ‘민주적 토론’ 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며 사회과학적 기여 또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21세기 자본론』보다는 오스트럼(Ostrom), 퍼트남(Putnam), 본슈타인(Bornstein), 플로리니(Florini), 레스타키스(Restakis)의 기존 저작들을 연상시킨다.³ 이들은 각각 공유자원 관리를 둘러싼 자치제도, 미국 12개 지역의 공동체와 사회

² 물론 사례연구 방법이 통계 분석에 비해 덜 ‘학술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가령 이 책의 부안 등용마을의 성공 사례 분석(11마당)과 이주자 문제 관련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실패 사례 분석(8마당)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뿐 아니라 비록 어려운 학술적 용어와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의 복잡적이고 동태적인 원인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³ 엘리노 오스트럼.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서울: 랜덤하우스; Robert Putnam. 2003.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David Bornstein. 2004. *How to Change the World: Social Entrepreneurs and the Power of Ide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nn M. Florini, ed. 2000. *The Third Force: The Rise of Transnational Civil Socie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ohn Restakis. 2010. *Humanizing the Economy: Co-operatives in the Age of Capital*. New Society Publishers.

적 자본, 사회적 기업가, 초국적 시민사회운동,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연구들이 다. 한 마디로 시장 대 국가의 이분법적 논의의 틀과 구조주의와 문화적 결정주의의 인식론적 한계를 넘어 어떻게 현 21세기의 글로벌 문제들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방식에 기초하여 ‘주의주의적(voluntaristic)’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천착하고 있는 실천 지향적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들은 필자의 ‘시민정치론’과 ‘거버넌스 연구’ 학부 및 대학원 과목의 교재 및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저서들이다. 그동안 한국 사례와 한국적 함의를 다루고 있는 좋은 참고문헌을 찾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뒤틀린 세계화』를 발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반가운 마음이다. 21세기 우리의 삶과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글로벌 이슈들이 무엇이고, 그 문제들의 심각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투고일: 2014년 5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4년 5월 19일

참고문헌

- 윤석준. 2014. “소수 세습자본이 정치 호령 ... 투명성 없인 민주주의 위기.” 『한겨레』(5월 15일).
- 프레스시안. 2014. “세월호 정치적 이용? 여러분을 선동하려 한다.” 『프레스시안』(5월 14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134>(검색일: 2014. 5. 14)
- Kaldor, Mary et al. 2004. “Global Civil Society in an Era of Regressive Globalisation.”
Global Civil Society 200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Belknap Press.

